

17대 국회에 바란다



글·문옥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머리글

지난 4월 총선은 한국의 선거 역사에서 몇 가지 신기원을 세웠다. 299명의 의원중 63%(188명)를 초선의원으로 물갈이 하였고, 1인 2표의 정당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여성의원의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13%나 되도록 많이 뽑았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당에게는 과반수의 의석을 그리고 제 1야당에게는 121석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시켜줌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이번 선거를

가리켜 국민이 국회를 황금분할시켰으니, 이제는 상생의 정치, 정쟁없는 정치로 국회가 보답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당초 12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 참여했으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5개 정당만이 4명 이상의 의원을 배출하였다. 17대 국회는 보건정책 역시 정당의 색깔만큼이나 그 스펙트럼이 무척 다양해지고, 광역화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에서 시작하여 자민련과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우리당의 자선의료(의료급여제도)에 이르기까지

지 각종 정책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어서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무상의료제가 등장함으로써 오래동안 공백으로 있었던 좌파의 보건정책을 국민들이 눈여겨 보기에 이르렀다(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80년대 말의 백기완 대선 후보인 줄로 안다). 아무튼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현실에서 어떻게 무상의료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을 하루 속히 제출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필자는 이들 5개 정당이 17대 국회를 상호 협조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 주기를 기원하며, 17대 국회의 보건정책에 다음과 같은 기대를 담아보도록 한다.

17대 국회에 거는 기대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가 21세기의 격랑을 이기고 국민의 건강권이 최대로 보장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의 10가지를 주문하는 바이다.

첫째, 모든 정책은 과학적 토대 위에서 얻어진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그 동안 상당수의 보건정책이 이러한 증거보다는 인기몰이와 선심과 졸속 행정 조치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증거를 토대로 한 보건정책이 입안 및 추진되자면 그 동안 과학적으로 산출된 각종 증거를 모아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의 증거를 새로 연구·개발해내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수 명의 비서 및 보좌관만으로

써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남의 머리를 빌려서라도 증거를 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이러한 증거 생산 작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내는 물론 원외 그리고 학계 및 산업계를 지원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모름지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자신의 보건정책 입안과정에서 과학적 증거를 들이미는 이러한 관행이 생활화되기를 기원한다.

둘째, 17대 국회는 개혁과 개방의 두 가지 보건정책 이슈를 조화시켜 우리나라 보건정책이 선진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온 보건의료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내실을 거두어야 할 때이고, 21세기의 화두인 보건의료 개방의 물꼬를 조심스럽게 터 나가야 할 시기이다. 모든 정당과 정권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셈이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의료 시장개방의 방향에 대한 개혁이 특히 그러하다. 보건의료제도 개혁이 발전의 원동력이듯이 보건의료 시장개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내일을 결정할 지렛대이다. 시장개방이 국제적 추세이고, 의료시장이 대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방을 해 나가되, '상호주의'와 '합작주의'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호 우선의 원칙'을 지키고, 연구를 통해서 국익이 최대화되는 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재정팽창을 유발하는 각종 공약의 비용

효과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선심용 정책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17대 선거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가의 재정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강요하는 인기위주의 각종 수당을 남발한다든지, 재원 마련 대책없이 감세공약을 편다든지, 가까운 장래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건 사례에 대하여는 17대 국회가 엄정한 재검토를 하기 바란다. 제 1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경우와 먼 꿈을 오늘의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넷째, 참여정부는 공공의료의 확충에 보건정책의 명운을 걸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참여정부는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장하기로 공약하였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국립병원의 분원과 지역보건센터의 신설 및 공공의료기관의 현대화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이 공공의료인지 그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어떻게 그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가 오리무중에 있다.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본 건이 된다. 시장개방의 압박을 받고 있는 17대 국회가 이 과제의 매듭을 슬기롭게 풀어서 모든 국민이 건강증진의 수혜를 공공의료부터 맘껏 누리게 될 날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 각국이 당면한 보건정책의 제 1의 과제는 국민의료비 절감에 관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한 나라의 일차의료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조직·융합이 없이

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에 관한 국제적 경험과 보건학계의 이론은 단골의사제도(우리나라의 주치의 등록제도)의 도입이 그 해법으로 되어 있다. 17대 국회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이 해법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풍토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는 바이다.

여섯째, 보건의료부문에 관한 개별법은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에 관한 기본법이 없이 각종 법규가 난립하거나 때로는 상충되고 있어서 이의 정비가 시급하다. '질병관리에 관한 기본법'과 '의료에 관한 기본법'처럼 '국민건강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타 관련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보건의료와 질병관리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 분담과 공공부문에서의 건강증진사업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에는 보험수가의 저수가 원칙과 관행적 일방 통행성이라는 고질이 도사리고 있다. 오늘날 병원경영이 위기에 처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불신의 결과에서 비롯되고 있다. 보험수가의 계약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명목과 무늬만 살아있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너무도 중요한 이 정책 수단을 활용하자면 깊게 패어 있는 정부와 의료계간의 '불신의 늪'을 건너 뛰어 넘어야 한다. 이 부문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뛰어넘는 영역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보건복지부가 노력한다 해도 경제부처와 시민 단체의 협조없이는 이 늪을 건널 수 없게 되어 있다. 17대 국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병원경영이 보다 투명화되고, 정부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국회가 감시기능과 동시에 제재력을 발휘해서, 불신이 극복되고, 계약이라는 약속이 정책수단으로 힘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말쑥 많은 진료행위별수가제 그 자체를 대체하는 것도 손쉽게 이를 수 있는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여덟째,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보건정책 과제이다. 오늘날까지 누적되어온 건강보험의 결점인 '반쪽보험'의 오명을 하루속히 극복하는 일이 된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이 개혁을 17대 국회가 이루어주기 바란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상응하게 인상하든지 경한 질환 자부담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극적인 추진은 그 중간쯤 되는 정책수단이다.

아홉째, 남북통일을 목전에 두고서도 통일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토론이나 학술활동 역시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17대 국회가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 정부를 채찍질 할 수도 있겠고, 국회가 직접 나설 수도 있겠다. 그 어느 수단을 거치더라도 남북 당사자간의 토론이 불가피하며, 선

진제국의 경험과 연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사항이다.

열 번째, 출산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력 저하가 가져올 사회구조의 변화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심각하다는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의 공적영역에서의 진출 자체가 더욱 권장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전개하자면 보건정책이 보육정책과 교육정책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 보건정책으로서의 보육정책과 탁아정책이 여성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기본 구조를 바꾸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눈여겨 볼 대목이라 생각된다.

맺는말

유권자들은 17대 국회가 부지런히 정책개발에 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당간의 정책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현장감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해주시기 바라고 있다. 17대 국회가 지금까지의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을 확신하면서 이 글을 끝맺도록 한다.  2004